



|   |  |  |
|---|--|--|
|  | <h1>보 도 자 료</h1> <h2>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h2> |  |
|---|--|--|

|       |                               |       |   |       |
|-------|-------------------------------|-------|---|-------|
| 작성부서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br>금융감독원 법무실 |       |   |       |
| 책 임 자 | 배지숙 과장 (2156-9620)            | 담 당 자 | 성미라 사무관 (2165-9623)                     |       |
|       | 박홍석 국장 (3145-5910)            |       | 김재호 팀장 (3145-5912)                      |       |
| 배 포 일 | 2015. 12. 14(월)               | 배포부서  | 대변인실(2156-9543~48)<br>공보실(3145-5789-92) | 총 17대 |

## 제 목 :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 신청은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

### 1. 개정 배경

- 금융규제민원포털 개설('15.3.31), 현장점검반 활동('15.4.2-) 등을 계기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이 비약적으로 증가

|        |  |
|--------|--|
| 법령해석   | •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에의 적용 여부를 밝힘      |
| 비조치의견서 | •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사전에 표명 |

- '15.4.1~12월 현재 총 499건 접수되었으며, 그 중 395건 회신 완료\*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
  - \* (참고) '01~'14년까지 비조치의견서 회신건수는 총 10건
- 지난 9.30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비조치의견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 내실화를 위한 방안 논의
  - \* 금융위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금융회사 실무자 등이 참석하여 선진국의 비조치의견서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내실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함
- 이번 개정은 신청인 범위 확대, 공동신청 제도 도입, 요청양식 통합 등 간담회시 논의된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운영규칙에 반영

## 2. 주요 개정 내용 [붙임1]

### ① 신청인 범위 확대(제2조제1호의2)

현 “(A비금융회사 실무자) 비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증권의 발행·공시 등 일정영역에서는 금융법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면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현행)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신청 자격이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으로 한정
- (개정) 신청인의 범위를 금융이용자로 확대하여, 금융법령에 따라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비금융 상장회사, 금융상품판매자 등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② 협회가 대신하여 신청 가능(제5조제2항)

현 “(B금융회사 실무자) 금융당국이 강한 의지로 제도 활성화를 추진해온 결과 이제는 금융회사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금융당국에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게 되었으나, 일부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요청이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금융회사가 소속된 협회를 통해서 금융당국에 질의할 수 있다면 제도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 “(C협회 실무자) 금융회사들이 당국의 견해를 확인하고는 싶지만 질의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소속 금융회사로부터 협회가 대신 질의해줄 것을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 (현행) 협회, 중앙회 등은 금융 유관기관으로서 신청자격이 있으나 소속 회원을 대신하여 요청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개정) 협회 등은 그 회원을 대신하여서도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③ 요청양식 통합·정비(제5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 “(D금융회사 실무자) 질의 사항이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중 어느 쪽으로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회사가 포털에 내용을 등재하기만 하면 금융당국이 알아서 유형을 분류하여 신청인에게 회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E금융회사 실무자) 요청서 기재항목 중 ‘상호 대립되는 견해’를 쓰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판단을 위해 반드시 기재가 필요한 사항만 적도록 개선되길 바랍니다.”

- (현행) 비조치의견서와 법령해석 요청양식 이원화
- (개정)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통합 요청양식을 마련하고, 요청서의 기재항목을 간소화하여 신청의 편의성 제고 [붙임2]

#### ☞ 요청절차 [붙임3]



#### ☞ 처리절차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접수 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로 유형 분류

⇒ 법령해석 ⇒ 금융위 담당부서 지정(시행세칙 제외)

⇒ 비조치의견서 ⇒ 금감원 법무실로 이첩 ⇒ 금감원 담당부서 지정

### ④ 공동 신청제도 도입(제5조의2)

- (현행) 개별 금융회사 또는 금융유관기관만 신청 가능
- (개정) 다수의 금융회사가 대표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가능하며, 회신 내용은 공동신청인 모두에게 유효

\* 특정행위에 다수 관계자가 관여할 경우 효율적이며, 금융회사의 개별 신청에 따른 부담 완화 도모

### ⑤ 조건부 답변 도입(제6조의2)

- (현행) 답변 방식에 대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음
- (개정)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권선통 기능 강화

### ⑥ 비공개기간 상한 설정(제12조제2항)

☞ “(F금융회사 실무자)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업권 내 다른 금융회사들도 그 내용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G금융회사 실무자) 비조치의견서 회신건수가 이제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규제민원포털에 공개되어 있는 회신문은 그보다 적어 어떤 회신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현행) 비조치의견서의 경우 공개를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음
- (개정) 비조치의견서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20일로 한정하여 업계 내 회신문 공유 촉진
  - \* 회신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등 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120일 경과 후에도 비공개 가능

## 3. 향후 일정

□ 개정 운영규칙은 금일 고시한 후 바로 시행

□ 2015년 회신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를 모아 업권별 책자\*\* 발간

\* 주요 회신사례는 [붙임4] 참고

\*\*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뿐만 아니라 현장점검반 회신결과를 책자로 발간하여 업계·협회 등과 공유하는 토론회 개최 예정('16.1월 중)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금융위원회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령해석 요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

3.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4. 대립되는 견해 및 그 이유  
5. 신청인 본점 소속의 준법감시인 또는 법무지원부서의 의견

② 신청인이 금융당국에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비조치의견서 대상이 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  
3. 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에의

치의견서를 -----  
-----  
-----  
-----  
-----.

1. (현행과 같음)  
2. 법령해석 요청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  
3.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의 대상이 되는 법령등의 조문, 관련 법령등의 조문, 그 밖에 관련 공문등의 내용

<삭 제>  
5. 신청인의 의견 또는 신청인 소속으로 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의 의견  
② 금융 유관기관 중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그 회원을 대신하여서도 요청할 수 있다.

해당여부와 그 이유  
4. 관련 법령의 조문 및 금융당국의 공문등  
5. 대립되는 견해 및 그 이유  
6. 신청인 본점 소속의 준법감시인 또는 법무지원부서의 의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공동신청)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대표자는 공동신청인을 위하여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절차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철회하려면 공동신청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금융당국의 대표자에 대한

|  |  |   |   |
|--|--|---|---|
| <p>제6조(처리절차) ①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소관부서에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부서를 지정한다.</p> <p>② (생략)</p> <p>③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와 금융감독원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요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④ ~ ⑥ (생략)</p> <p>&lt;신설&gt;</p> | <p>통지는 공동신청인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p> <p>⑤ 대표자가 변경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동신청인이, 공동신청인의 범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당국에 알려야 한다.</p> <p>제6조(처리절차) ① ----- 제5조제1항-----</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제5조제1항-----</p> <p>-----</p> <p>-----.</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2(조건부 답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는 경우에 신청인의 요청내용만으로는 제재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p> | <p>제12조(회신내용의 공개)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등 공개 연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청인과 협의하여 비조치의견서의 공개를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 &lt;단서 신설&gt;</p> | <p>조건으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답변을 할 수 있다.</p> <p>제12조(회신내용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p> <p>-----.</p> <p>다만,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회신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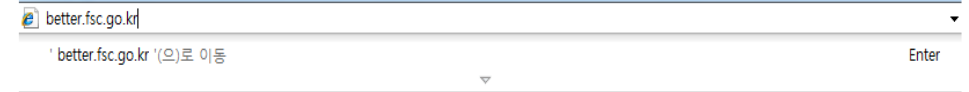
## 붙임2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통합 요청양식

###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서

|  |    |                                 |      |     |      |             |  |  |  |
|--|----|---------------------------------|------|-----|------|-------------|--|--|--|
| 신청인  | 개인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  |    | 주소                              |      |     |      |             |  |  |  |
|  |    | 연락처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  |
|  | 법인 | 상호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br>번호 |  |  |  |
|  |    | 소재지                             |      |     |      |             |  |  |  |
|  |    | 연락처                             | 소속부서 |     | 담당자  |             |  |  |  |
|  |    | 전화번호                            |      |     | 휴대폰  |             |  |  |  |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  |
| 질의요지   |    |                                 |      |     |      |             |  |  |  |
| 법령해석 요청의<br>원인이 되는<br>구체적 사실관계<br>(비조치의견서 경우<br>구체적개별적 행위) |    |                                 |      |     |      |             |  |  |  |
| 관련 법령의<br>조문 또는<br>공문 등                                    |    |                                 |      |     |      |             |  |  |  |
| 신청인의 의견<br>또는<br>준법감시인이나<br>법무지원부서의<br>검토의견                |    |                                 |      |     |      |             |  |  |  |
| 회신문<br>비공개할<br>희망하는 경우                                     |    | ■비공개 희망 사유( )<br>■비공개 희망 기간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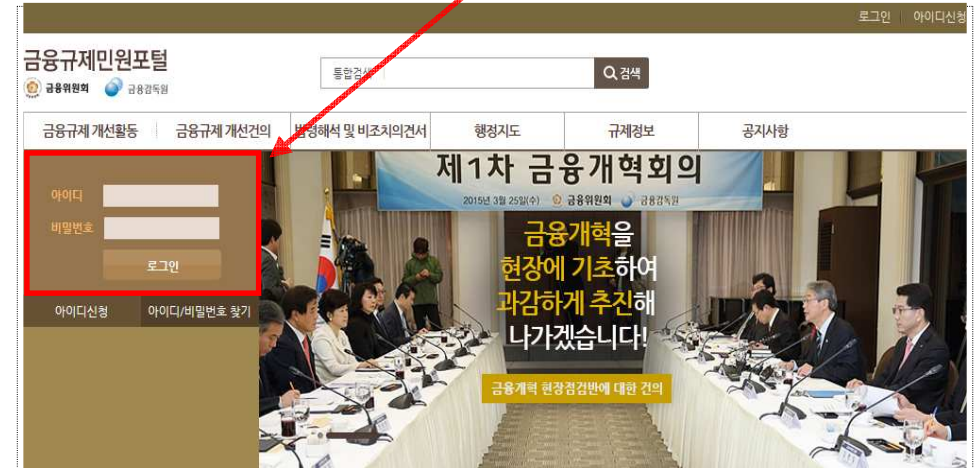
## 붙임3 요청방법

### ①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접속



### ② 금융규제민원포털 메인 화면 ▶ 로그인

※ 공개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는 로그인 없이 누구나 조회 가능



### ③ 금융규제민원포털 메인 화면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요청하기



#### ④ 요청서 작성

#### ⑤ [마이페이지]에서 요청서·회신문 확인

#### 붙임4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주요 회신사례

##### (사례1) 법령해석을 통한 핀테크 활성화

##### “모바일 카드 단독발급 허용”

- ☐ **(질의배경)** A카드회사는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와 핀테크 기술 발전 등의 추세에 따라 실물 신용카드를 전제하지 않고 **모바일 신용카드를 단독으로 발급하고자 함**  
 \* 기존 모바일 신용카드는 **실물 신용카드를 전제**로 하여 발급
  - 이에 A카드회사는 **스마트폰에 부착된 USIM 카드**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증표”에 해당하여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도 법에서 정하는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법령해석 요청**
- ☐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정의 중 “증표”는 그 형태나 규격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플라스틱 실물카드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고**
  - 모바일카드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적으로 결제가 가능한 증표로서 기능한다면 **법상 신용카드에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
  - 동 회신에 따라 A카드회사는 **발급 과정의 편리함과 신속성뿐만 아니라 저렴한 연회비 등의 장점을 두루 갖춘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를 출시**

##### (사례2)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핀테크 활성화

##### “모바일금융플랫폼을 통한 계좌잔액조회 허용”

- ☐ **(질의배경)** B은행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직불결제, 계좌조회 등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준비하면서,
  - 최초 등록(가입)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된 계좌에 대해서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에 접속하여 등록된 계좌의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잔액조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나, 이러한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되는지 우려하여 **비조치의견서 요청**
- ☐ **(회답)** 계좌잔액을 조회하는 것은 출금, 결제서비스에 비해 위험 수준이 낮고 인터넷뱅킹 등의 계좌잔액 조회서비스 인증방법과 동등한 수준이므로,
  - 모바일 금융 플랫폼에서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계좌잔액 조회를 허용하는 것은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



### (사례3)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핀테크 활성화

#### “비대면인증을 통한 대출원리금 선결제서비스 허용”

- **(질의배경)** C저축은행은 전자금융 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웹(web)이나 앱(app)을 통한 원리금, 이자 등 선결제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함
  - \* 대출고객이 웹이나 앱에 접속하여(로그인 필요) 대출원리금 선결제 신청서(추심이체에 대한 동의 포함) 작성 및 공인인증서 인증 완료하면 고객계좌에서 신청금액만큼 추심이체
- C저축은행은 해당 선결제 서비스 신청을 비대면인증을 통해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요청
- **(회답)** 금융당국은 선결제서비스 신청서에 추심이체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하였다면 별도의 대면확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

### (사례4) 법령해석을 통한 보수적 업무처리 관행 개선

#### “동일 금융자주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렌탈시 담보 확보 의무 비대상 확인”

- **(질의배경)** D금융지주그룹 소속 E캐피탈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임대업(69110)을 영위하면서 D금융지주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렌탈을 실행해오면서,
  - 보수적 업무처리 관행에 따라 동 거래를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행위로 보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하여 거래 계열사에 대해 자동차 렌탈 실행액의 130% 범위 내에서 담보를 확보하여 왔음
  - 이로 인해 D금융지주그룹의 계열사들은 담보제공에 따른 자산운용의 제약과 업무상 번거로움을 이유로 E캐피탈과의 거래를 기피하여 E캐피탈의 경쟁력 저하로 귀결
  - E캐피탈사는 렌탈 업무를 신용공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계열사 자동차 렌탈과 관련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
-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임대업(69110)에 따른 자동차 렌탈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제11항에서 의미하는 금융거래상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 렌탈 거래 계열사에 대하여 렌탈 실행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
- 위 회신내용에 따라 E캐피탈사는 보수적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업계 내 경쟁력을 제고함

### (사례5)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업무처리 관행 개선

#### “적금불입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질권설정계약 허용”

- **(질의배경)** F카드회사는 적금담보를 활용한 기업카드 또는 외국인개인카드의 이용한도 부여와 질권설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 적금 유효담보가(적금잔액의 95% 이내) 이내로 이용한도를 부여하고, 이용한도의 110% 해당액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 적금불입액이 증가하면 적금 유효담보가 이내로 이용한도를 재부여하고 이용한도의 110% 해당액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서를 재작성하는데, 이때 회원은 영업점을 내방해야 함
  - 이는 금융권의 업무처리 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회원에게는 영업점 내방에 따른 불편을, 카드사에게는 업무상 번거로움을 초래
  - 이에 F카드회사는 회원의 적금불입예상액과 카드 이용한도를 정해서 적금불입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적금 불입액 증가에 따른 이용한도 증액이 회원의 요청만으로 수시 가능토록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요청
- \*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의 요청에 따라 질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문화
- **(회답)** 실제 적금불입액에 상당하는 금전지급청구권뿐 아니라 장래 발생하는 불입예상액(또는 만기환급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담보로 하여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 다만, 적금불입액 증가시 고객 의사에 반하여 이용한도의 임의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사례6) 법령해석을 통한 제도 개선**

**“기업대출 미취급 외은지점이 본점의 심사 및 승인을 특하는 경우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제공 허용”**

- ☐ **(질의배경)** G외국은행 서울지점은 수출기업이 신용장조건과 일치된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수출상에게 소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대금 지급
  - 그러나 제시된 선적서류가 관련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신용공여가 요구되는바,
  - 기업 대출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는 G외국은행 서울지점이 본점 소재 신용리스크관리부의 내부 심사 및 승인을 특하여 일시적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는 행위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
- ☐ **(회답)** 업무 위탁이 아니라 본점의 업무지시를 지점이 수행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일견 업무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외은 국내지점이 외은 본점에 대출심사 및 승인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금융회사의 건전성·신인도를 크게 저하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크지 않는 등 업무위탁규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 국내은행 본점이 거래신용공여에 대한 심사·승인을 하고 국내은행 지점이 신용공여를 실행하는 것과 유사한 업무수행이므로, 예외적으로 업무위탁을 허용함이 바람직
  - 따라서 동 건은 업무위탁규정에 위반되지 않음

**(사례7)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제도 개선**

**“금융투자업자와 비계열은행의 복합점포 운영 허용”**

- ☐ **(질의배경)** H증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은행과 업무제휴 등의 방식을 통해 복합점포를 설치하여 고객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요청
- ☐ **(회답)**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와 비계열은행 간 복합점포 설치 등에 대해 달리 정하는 바가 없고,
  - 금융투자회사와 비계열은행간 복합점포 운영으로 비용절감 및 판매채널 확보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며,
  - 업권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경쟁촉진 및 원스톱(one-stop)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해져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진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방향과도 부합됨
  - 비계열은행과 복합점포 공동이용으로 금융사고 및 불건전영업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에 따라 충분한 내부통제장치 등 갖추고, 고객정보 공유 시 고객의 동의를 받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준수 필요